



2025년 세번째

재정정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목 차

01

CHAPTER

재정분석



새 정부 청사진 발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03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정부 예산안	06
2026년 국세 수입 예산안	10

02

CHAPTER

재정이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15
시·도 본청 2023·2024회계연도 결산 비교 분석	18
지방재정 30년 변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21
재정뉴스	24

03

CHAPTER

재정정책



고향사랑기부제, ‘법인의 기부허용’에 대한 쟁점과 방향	33
세종시 농업인 수당 성과와 과제	36
한국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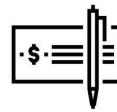
'재정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최근 중앙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국가·지방재정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정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04

CHAPTER

경제동향



정부 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43
정부 재정동향 - 기획재정부	44
NABO 산업동향&이슈 - 국회예산정책처	45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46

05

CHAPTER

재정통계



주요 경제지표	49
세종시 주요 통계	52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55

01

재정분석

- ❶ 새 정부 경제 청사진 발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❷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정부 예산안
- ❸ 2026년 국세 수입 예산안

1. 새 정부 경제 청사진 발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8.22.)

-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AI와 초혁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대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진짜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함

“진짜성장” 패러다임

◇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성장”,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 ① 구체적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টে을 목표(King pin)로 설정
- ② 국가의 모든 역량(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을 총동원해 선택과 집중(高성과 분야 과감히 투자, 低성과 분야 구조조정)
- ③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융합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 창출

◆ 핵심 아이টে별 ①기업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고, ②추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 ③기재부는 지원·뒷받침 → 추진단 구성해 전방위 집중 지원

⇒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

※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몇 개나 만드냐가 관건

□ AI 대전환 ·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점점 낮아지는 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 '추격경제' ⇒ '선도경제'로 전환하고,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전방위 AI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 AI 대전환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 또한,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도입함
 - ▶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국민 공모자금·연기금·민간자금 50조원과 정부보증·산업은행 출연을 통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

AI 대전환(15대 과제)		초혁신경제(15대 과제)	
기업	▶ AI 로봇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진입	첨단 소재· 부품	▶ SiC전력 반도체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AI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LNG 화물창 LNG선 시장점유율 70%, 세계 1위
	▶ AI 선박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응용기술 확보
	▶ AI 가전 글로벌 AI 가전 시장점유율 1위		▶ 그래핀 에너지·센서 분야로 상용화 확대
	▶ AI 드론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 및 활용		▶ 특수탄소강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 기술 1위
	▶ AI 팩토리 제조기업 AI 도입률 40%	기후· 에너지· 미래 대응	▶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AI 반도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탑재 제품 출시		▶ 해상풍력·HVDC 해상풍력 및 HVDC 경쟁력 확보
공공	▶ AI 복지·고용 모든 행정서비스 AI 도입		▶ 그린수소·SMR 그린수소 기술확보·SMR 표준설계인가 추진
	▶ AI 납세관리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		▶ 스마트농업·수산업 AI 기반 스마트 농업·양식 선도지구 (1개소) 조성
	▶ AI 신약심사 신약심사 기간 주요국 수준 단축		▶ 초고해상도위성개발·활용 다목적 위성 8호 개발·기후 예측모델 개발
국민	▶ 국내 AI인재 AI 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K- 분업	▶ K-바이오·의약품(AI-바이오)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
	▶ 해외 AI인재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콘텐츠 수출 250억불
기반 조성	▶ 데이터 개방 데이터 시장규모 확대		▶ K-뷰티통합클러스터 중소기업 수출 100억불 달성
	▶ 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 진입		▶ K-식품 K-식품 수출 150억불
	▶ 국가 AI협력 세계 최고수준 버티컬 AI 확보		

□ 수도권 1극⇒5극3특 체제 전환으로 균형성장 도모…중기·벤처·소상공인 살리기

○ 지방우대 정책체제로 전면 개편해 수도권 2극체제 극복, 5극3특 균형성장

- ▶ AI 기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해 지역주도 성장

초광역권	성장엔진(예시)
①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
② 서남권 전북·광주·전남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산업
③ 대경권 대구·경북	✓로봇·자동차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④ 중부권 대전·충청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기초R&D
⑤ 강원·제주권	✓관광, 청정 에너지, 바이오

※ 구체적 성장엔진은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선정

- ▶ 지역 투자 촉진 및 소득 기반 확충, 제도약 지원 등 격차 해소

○ AI 기반 창업·벤처 불업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 유망 초기기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
- ▶ AI 대전환, 스케일업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당면 애로지원 병행

- ▶ 규모화·스마트화 통해 근본적 경쟁력 제고
- ▶ 금융비용·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시정…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탈취 대응 강화 ▲핵심 인프라 전면 정비, 협업구조 확립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 시장 이중구조 완화 ▲산업안전을 위한 책임·의무·지원 강화

□ 자금 흐름 ‘부동산 ⇒ 증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 추진

- ▶ 상법 개정안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스튜어드십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추진
- ▶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 강경 대응

2.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정부 예산안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8.29.)

□ 정부는 8.29(금)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함.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핵심과제 이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예산안의 기본방향

-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
- 초혁신경제,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분에 전략적 재정투자
- 저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 예산안 전체 모습

- (총수입)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2조원(+22.6조원)
 - ▶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25년 대비 +7.8조원 증가 ('25년 본예산 382.4 → '26년안 390.2조원)
 - ▶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8조원 증가('25년 본예산 269.1 → '26년안 283.9조원)
- (총지출)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0조원(+54.7조원)
 - ▶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 ('25년 본예산 2.5 → '26년안 8.1%)
 - ▶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
- (수지·채무) 관리재정수지 $\Delta 4.0\%$, 국가채무 51.6%
 -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0\%$ 이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Delta 1.2\%p$ 상승한 $\Delta 4.0\%$
 - ▶ 국가채무(GDP 대비)는 '29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 재정 혁신

○ 지출 구조조정

- ▶ 역대 최대인 △27조원 수준을 절감하여 핵심과제에 재투자

* 지출구조조정 실적(조원): ('22) △12.8 ('23) △24.1 ('24) △22.7 ('25) △23.9

- ▶ 사업 재구조화 적극 추진,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병행

- ①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추진
- ② 연례적 행사·홍보,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 효율화 도모
- ③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병행
- ④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들의 제안 적극 반영

○ 재정사업 지방우대

- ▶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 시범 도입

-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 구분

- (특별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지방 자율성 제고

- ▶ (포괄보조)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25년 3.8 → '26년 10.6조원으로 3배 정도 대폭 확대
- ▶ (초광역권) 초광역권 단위로 수행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26년) 사업설계를 위한 사업기획비 반영 → ('27년~) 본격적으로 추진

○ 성과지향 출연기관 개편

- ▶ (과학기술계) 소규모 수탁과제(1,877개, 4,685억원)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과제(100개)에 집중 투자
- ▶ (인문사회계) 기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고 부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 → ①수탁과제 최소화, ②부처 의견수렴 의무화

□ 중점 투자방향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51→72조원, +41%)

1. AI 3강을 위한 대전환 (3.3→10.1조원)

- **신규** 퍼지컬 AI 중점사업 추진 0.5조원
- **신규** AX-Sprint 300(생활밀접형) 0.9조원
- 국내 핵심 인재 1.1만명 양성 등 0.6조원
- GPU 1.5만장 구매 2.1조원

2. 신산업·R&D 혁신 (36.4→44.3조원)

- R&D 역대 최대 증가(+19.3%) 35.3조원
- *A·B·C·D·E·F 첨단기술 고도화(10.6조)
- **신규** 국민성장펀드(5년간 100조원 이상) 1.0조원
-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 1.0→2.0조원

3. 통상현안대응·수출 자원 (1.6→4.3조원)

-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 강화 0.1조원
-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0.2조원

4.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6.0→7.9조원)

- **신규** RE100 산단, 분산형 전력망 0.3조원
- 신재생에너지 보조·용자 확대 0.5→0.9조원
- **신규**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 0.2조원

5.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4.2→5.7조원)

- 한류연계산업(관광, 푸드, 뷰티 등) 3.2조원
-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0.5조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44→175조원, +22%)

1. 지방거점성장 (19.0→29.2조원)

-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0.9조원
-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0.5조원
-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6개 군) 0.2조원
-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대 1.1조원

2. 저출생·고령화 대응 (62.6→70.4조원)

- 아동수당 연령 상향(+1세) 및 지방 우대 2.5조원
- **신규** 청년미래적금(납입금 6/12% 매칭) 0.7조원
- **신규** 비수도권 취업청년 우대 0.9조원
- **신규**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0.1조원

3. 촘촘한 사회안전메트 (29.2→32.1조원)

- 기초생활보장 확대 22.5조원
- 장애인 돌봄·일자리 확대 4.6조원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상담 지원 등 0.1조원

4. 민생·사회연대경제 (17.6→26.2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지원 1.2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25만원) 0.6조원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0.2조원

5.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16.0→17.6조원)

- 산업재해 예방 필수설비·인력 지원 0.3조원
-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0.7조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5→30조원, +18%)

1. 재난 예측·예방·대응(3.9→5.8조원)

- 풍수해정비 등 재난 대응 2.6→3.3조원
- **신규** 한국형 기상 예측 시스템 등 276억원

2.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21.2→23.8조원)

- 최첨단 무기체계로 전환 3.2조원
- 남북협력기금 확대 0.8→1.0조원

□ 세종시, 2026년 정부예산안 1조 7,279억원 반영

○ 2026년 정부 예산안 세종시 관련 국비는 올해보다 9.4% 증가

- ▶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반영
- ▶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154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 23억원 및 국립박물관 단지 492억원 반영
- ▶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연구비 3억원, ‘한글’ 교육 일원화를 위한 ‘한글 문화 교육센터’ 운영비 5억원 신규 반영 등
- ▶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사업의 설계비 3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원 반영
- ▶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 15억원 신규 반영, AI 기반 민원자동처리, ACT 기반 축사악취 저감 등 ‘스마트빌리지 개발·보급’ 신규 사업비 18억원 등 반영

3. 2026년 국세 수입 예산안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8.29.)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은 총 390.2조원으로, 2025년 2차 추경 대비 18.2조원(+4.9%) 증가하여 편성됨.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고르게 증가함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현황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국세수입 예산은 390.2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 2차 추경예산 372.1조원 대비 18.2조원 늘어난 규모임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8.6조원으로 2025년 추경(361.5조원) 대비 17.1조원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1.6조원으로 2025년 추경(10.6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한 규모임

[2026년 국세수입 전망]

구분	2025년(2차 추경)	2026년 예산안	증감(증가율)
총 국세수입	372.1조 원	390.2조 원	+18.2조 원 (+4.9%)
일반회계	361.5조 원	378.6조 원	+17.1조 원 (+4.7%)
특별회계	10.6조 원	11.6조 원	+1.0조 원 (+9.6%)

□ 세목별 증감 현황

- 2026년에는 주요 세목들에서 세금이 골고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세목이 모두 늘어나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임
- 소득세: 2026년 수입은 132.1조원, 약 5.3조원 증가(+4.2%)
 - ▶ 경기 회복으로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늘어나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도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 법인세: 2026년 수입은 86.5조원, 약 3조원 증가(+3.6%)

- ▶ 2025년 기업 실적 호조세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 부가가치세: 2026년 수입은 86.6조원, 약 3.2조원 증가(+3.9%)

- ▶ 내수 경기(국내 소비와 투자 등 국내 경제 활동)가 2026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에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 증권거래세 : 2026년 수입은 5.4조원, 약 1.5조원 증가(+39.8%)

- ▶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15%에서 0.20%로 인상됨에 따라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만으로도 약 2.1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 등)도 약 2.4조원 증가 (+17.2%)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증여세(증여나 상속에 매기는 세금)도 1.6조원 증가 (+10.2%)할 전망이다

- ▶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역시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5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세목별 감소 현황

○ 관세(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2026년 수입은 7.2조원, 약 1.2조원 감소(-14.1%)

- ▶ 국제 무역 여건 등으로 수입 물품 규모나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자소득세(예금 이자 등에 매기는 세금): 2026년 수입은 6조원, 약 3천억원 감소(-4.8%)

- ▶ 시장 금리 하락 등으로 예금 이자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영함

□ 세수 전망과 재정운용 영향

○ 2026년 세입 예산 전망은 세금 수입 증가로 정책 사업 재원 확충과 국가채무 부담 완화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 여유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세 수입이 약 4.9%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며, 향후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함

참 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4년 실적	'25년 2차 추경예산	'26년 예산안	'25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365,324	3,720,850	3,902,454	181,605	4.9
[일 반 회 계]	3,261,793	3,614,604	3,786,015	171,412	4.7
◇ 내 국 세	2,982,593	3,291,519	3,439,013	147,495	4.5
○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321,175	52,983	4.2
▪ 근 로 소 득 세	610,491	647,310	684,511	37,201	5.7
▪ 종 합 소 득 세	195,265	220,582	226,270	5,688	2.6
▪ 양 도 소 득 세	166,852	194,116	205,245	11,129	5.7
▪ 이 자 소 득 세	71,958	63,121	60,118	△3,003	△4.8
○ 법 인 세	625,112	835,671	865,474	29,803	3.6
○ 상 속 증 여 세	152,981	154,437	170,163	15,726	10.2
○ 부 가 가 치 세	822,358	833,292	865,750	32,457	3.9
○ 개 별 소 비 세	86,566	87,479	93,786	6,307	7.2
○ 증 권 거 래 세	47,602	38,454	53,753	15,299	39.8
○ 인 지 세	8,460	8,836	7,734	△1,103	△12.5
○ 과 년 도 수 입	65,334	65,156	61,178	△3,979	△6.1
◇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40,012	164,122	24,110	17.2
◇ 관 세	69,723	84,093	72,214	△11,879	△14.1
◇ 교 육 세	53,738	57,765	64,433	6,668	11.5
◇ 종 합 부 동 산 세	41,847	41,215	46,233	5,018	12.2
[특 별 회 계]	103,531	106,246	116,439	10,193	9.6
◇ 주 세	33,282	32,093	31,451	△642	△2.0
◇ 농 어 촌 특 별 세	70,249	74,153	84,988	10,835	14.6

02

재정이슈

- ❶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❷ 시·도 본청 2023·2024회계연도 결산 비교 분석
- ❸ 지방재정 30년 변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❹ 재정 뉴스

1.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8.28.) 및 참고자료

□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여 추진 중인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지방세제 개편 추진 개요

- ▶ (배경)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 민생 회복을 위한 합리적·실용적 지방세 정책 추진
- ▶ (대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일정) 입법예고('25.8.29.~'25.9.22.)→국무회의('25.9.30.)→국회제출('25.10월초)→시행('26.1월 가결 시)

□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

○ 국가 균형발전

-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 산업·물류·관광단지 조성 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지방세 차등 감면

※ 산업단지: (기존) 수도권 35~50%, 비수도권 35~75% 취득세·재산세 감면 → (개정) 수도권 15~35%, 비수도권 35~60%, 인구감소지역 50~75% 감면
물류단지: (기존) 취득세·재산세 25~50% 감면 → (개정) 수도권 15~35%, 비수도권 25~50%, 인구감소지역 35~75% 감면
관광단지: (기존) 취득세 25% 감면 →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감면

-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특례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편

※ 지식산업센터: (기존)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 (개정) 수도권만 감면률 20%p씩 하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기존)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개정) 수도권만 감면률 15%p씩 하향
기업부설연구소: (기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유형별 취득세·재산세 35~60% 감면 → (개정) 기업 유형별로 수도권 30~45%, 비수도권 35~60% 취득세·재산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25년→'28년) 및 대상 업종 확대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지방세 특례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및 대상 주택 가액의 비수도권 기준 상향*,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26년→'28년)

* 특례 적용 비수도권 주택 가액: (취득세) 취득 가액 3억원→12억원 이하 / (재산세) 공시가격 4억원→9억원 이하

※ '세컨드홈' 세제 지원: (취득세)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150만원 한도)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Delta 0.05\%$),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용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26년 한시) 및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기업의 사원용 주택·기숙사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규정 신설
-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25년→'28년), 재산세 감면 기간(최대 8년) 설정

※ (취득세)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률 정함 /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50% 범위, 이후 3년간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률 정함

▶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 빈집 정비·활용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입자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신설('26년 한시),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담 완화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신축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 제외 기간 연장('25년→'26년)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 및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150만원 한도) 신설, 토지를 주차장 등 공용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 (기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해 3년간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 → (개정)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전체 별도합산 적용

▶ **(투자·고용 촉진)**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청년층 수도권 이직 방지,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및 지방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의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1인당 월급여액의 10%, 36만원 한도) 신설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규정 신설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직접 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연장('25년→'28년)

○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지원)** 신혼부부·청년층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25년→'28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기존) 소형주택은 300만원, 그 외는 200만원의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 → (개정) 인구감소지역은 구입 주택 종류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원 적용

- 출산·양육 가정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내 100%) 연장('25년→'28년)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규정 신설

- ▶ **(서민·취약계층 지원)** 공공임대, 사회복지 관련 기관·법인 등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 공공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취득세 25%, 재산세 50%)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감면* 연장('25년→'2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애인·근로자 지원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취득세 25%, 재산세 25%) 연장('25년→'28년)
- *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 유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25~100%,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 ▶ **(생활 및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에 지방세 감면 연장 등
 - 농·수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25년→'28년)

※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 (지방농수산물공사)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국가철도공단) 취득세 25~100%, 재산세 100% 감면 / (한국철도공사) 취득세 25~50%, 재산세 50% 감면 / (지방도시철도공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2년간 100%, 3년간 50%) 규정 신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의 권리와 편의 증진,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체납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생업용 물품, 신체보조기구 등 추가)
 - 주택 취득 후 중과세 제외 요건 미충족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 규정 신설(가산세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납세자보호관 참여 확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범위 확대 및 환급 및 징수유예 규정 신설
 - 납세자 예측가능성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재조사는 신속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 축소(15일→7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4개월→5개월)
- ▶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 정비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 0.1%p 인상
 -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
 - ※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개선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대가가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 적용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에도 신설과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세 적용
 - 세금이 감면된 신축 목적 토지의 추정 요건 완화(토지 '직접 사용' 개시 기한 1년→2년), 사회복지법인 취득세 추정 사유 확대(설립허가 취소·시설 폐쇄 포함)

2. 시·도 본청 2023 - 2024회계연도 결산 비교 분석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2025.8.13.)

-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종시는 세입 징수율과 자체수입 징수율이 전국 최저로, 세입 기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남. 다만 집행률과 이월률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어 재정 운용 효율성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세입 관리와 집행력 제고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 배 경

-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수 악화라는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짐. 이에 따라 각 시·도 본청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징수율(세입), 자체수입 징수율, 집행률, 이월률의 4대 지표로 평가함
-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11개 지방세 세목을 모두 징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지표상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부분이 많아 개선 필요성이 도출됨

□ 세입결산 분석

1. 세입결산액 징수율

- ▶ (전국 평균) 98.35%
- ▶ (세종시) 96.82% (17개 시·도 중 최하위)
- ▶ 전년 대비 $\triangle 0.89\%p$ 하락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징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짐
- ▶ 이는 세종시의 세입 구조상 세목이 많고 교부세 비중이 크지 않은 특수성도 일부 작용

2. 자체수입 징수율(지방세+세외수입)

- ▶ (전국 평균) 95.90%
- ▶ (세종시) 93.49% (전국 최저)
- ▶ 전남 본청(98.53%)과 5%p 이상 격차 존재
- ▶ 전년 대비 $\triangle 1.43\%p$ 하락, 징수노력 저조로 평가됨

3. 세부 내역

- ▶ (지방세 수입 징수율) 세종시 95.22%로 전국 최저
- ▶ (세외수입 징수율) 세종시 87.13%로 전국 최저 수준, 전년 대비 $\triangle 5.28\%p$ 급락
→ 특히 세외수입의 징수 부진이 전체 지표 하락의 핵심 요인임

□ 세출결산 분석

1. 집행률

- ▶ (전국 평균) 94.62%
- ▶ (세종시) 92.81% (평균보다 1.8%p 낮음)
- ▶ 다만 전년(89.74%) 대비 +3.07%p 개선, 집행률 제고 노력은 확인되나, 여전히 광역시 평균(93.93%)보다 낮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 필요성이 큼

2. 이월률

- ▶ (전국 평균) 2.95%
- ▶ (세종시) 4.27% (광역시 평균보다 높음)
- ▶ 그러나 전년(6.81%) 대비 $\triangle 2.54\%p$ 감소, 전국에서 가장 큰 개선 폭 기록.
재정 운용의 유연성은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 필요

□ 2023년 대비 변화

- (징수율) 전국적으로는 소폭 개선(+0.06%p), 세종시는 오히려 악화($\triangle 0.89\%p$)
- (자체수입 징수율) 세종시는 $\triangle 1.43\%p$ 하락, 세외수입 특히 $\triangle 5.28\%p$ 급락
- (집행률) 세종시는 +3.07%p 개선, 전국에서 가장 개선 폭이 큰 축에 속함
- (이월률) 세종시는 $\triangle 2.54\%p$ 개선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

□ 시사점 및 개선과제

1. 세입 기반 취약성 보완

- ▶ 세종시는 광역시·도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자체 징수 세목이 많음에도 징수율은 전국 최저

- ▶ 세외수입 징수율 하락은 행정 집행력 및 체납 관리 미흡 가능성을 시사
→ 체납 관리 강화, 세외수입 징수 체계 보완이 시급

2.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 ▶ 집행률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
-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다 편성 방지, 사전 절차 간소화, 집행력 강화 필요

3. 이월 관리 성과 유지

- ▶ 이월률 대폭 개선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평균보다 높음
- ▶ 계속비 이월 최소화, 연내 집행률 제고를 통한 지속적 관리 필요

4. 재정책임성 강화

- ▶ 세종시의 낮은 징수율은 주민 신뢰 저하와 직결
- ▶ 지방세수 확대와 함께 중앙정부 이전재원 축소에 대응할 재정 자립성 확보 전략 필요

□ 결 론

- 세종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징수율·자체수입 부문 전국 최저, 집행률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음, 이월률은 전국 최고 수준 개선이라는 엇갈린 성과를 보였음
- 이는 세종시가 여전히 세입 기반 취약성과 집행력 한계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세외수입 관리 강화·집행력 제고·이월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한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됨

3. 지방재정 30년 변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출처 지방세포럼 80호(7월호)

□ 올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 성과와 한계를 요약하여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주민들의 기대 등을 간략히 파악하고자 함

□ 서론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변화와 추세분석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세입과 재정지출이 정책 실현의 근간이기 때문임

▶ 미래의 바람직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안

□ 지방재정의 변화와 특징

○ 내실없는 재정규모의 팽창

▶ 지난 30년 동안 지방재정 변화는 규모와 형식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 이러한 규모 확대에 대해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도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호화청사와 박물관, 미술관 및 일회성 축제와 행사 중심의 낭비가 심하다고 비판

- 특히 교육재정 역시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20.79%)로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

▶ 개별 지방정부 역시 지출의 타당성과 책임성보다는 단순히 재정 규모를 자랑하기에 급급하지, 주민을 위한 수요 추정이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심에서 투자와 대비 및 성장 먹거리 등은 크게 고민하지 않음

- 지역주민 역시 대부분 자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보자는 식의 규모에 집중

○ 지속적인 재정 의존성 심화

▶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지방의 필수적 세입 절반 이상을 중앙 정부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 '25년 올해 기준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지방정부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105개로 전체의 43.2%이고, 특히 군(郡)은 67개로 군 전체의 81.7%가 해당

○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급증

- ▶ 지방정부의 핵심 기능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이지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각종 선거 전략으로 남발하는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보조금이 급증하고, 이에 대해 지방은 약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상은 결코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중복지원과 재정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복잡화 가중

- ▶ 지방재원의 보전과 정권마다 새로운 정책을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예: 군특회계, 광역 경제권, 공모사업, 개발특구 등)를 양산하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와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조정제도가 추가
- ▶ 무엇보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 통합이 요구되는데,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및 2023년 추진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사업)에도 장애임

○ 지방보조금 증가

- ▶ 지방의 성질별 세출분류는 크게 변하지 않아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추세 중 가장 큰 특징은 경상이전으로 1991년 6.3%이던 것이 2023년 47.1%로 급증함
 - 이는 지방 역시 각종 민간단체 지원 등 간접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임
- ▶ 1991년 60.4%이던 자본지출이 2023년 26.5%에 불과하고, 경제개발비 비중도 하락하여 지방의 세출이 경상경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성질별 지방세출 결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2015	2017	2019	2023
합계	218,501 (100.0)	366,642 (100.0)	539,793 (100.0)	821,860 (100.0)	1,507,893 (100.0)	1,412,334 (100.0)	1,753,338 (100.0)	2,103,211 (100.0)	2,453,178 (100.0)	3,165,297 (100.0)
인건비	27,543 (12.6)	47,598 (13.0)	59,205 (11.0)	80,523 (9.8)	139,267 (9.2)	165,072 (11.6)	199,672 (11.3)	242,473 (11.5)	262,115 (10.7)	307,862 (9.7)
물건비	24,131 (11.0)	45,078 (12.3)	64,788 (12.0)	82,622 (10.0)	77,179 (5.1)	100,587 (7.1)	117,538 (6.7)	144,819 (6.9)	159,140 (6.5)	203,013 (6.4)
경상 이전	13,716 (6.3)	41,585 (11.3)	97,641 (18.9)	155,569 (18.9)	507,417 (33.7)	485,177 (34.3)	688,393 (39.2)	895,491 (42.6)	1039,903 (42.4)	1491,623 (47.1)
자본 지출	131,905 (60.4)	204,182 (55.7)	265,571 (49.2)	384,784 (46.8)	554,621 (39.6)	501,855 (35.5)	522,244 (29.7)	604,351 (28.7)	723,639 (29.5)	840,832 (26.5)

구분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2015	2017	2019	2023
융자 및 출자	6,262 (2.9)	5,993 (1.6)	9,395 (1.7)	11,630 (1.4)	35,114 (2.3)	13,031 (0.9)	14,122 (0.8)	12,509 (0.6)	11,597 (0.5)	10,244 (0.3)
보전 재원	8,817 (4.0)	15,060 (4.1)	25,078 (4.6)	18,848 (2.3)	32,541 (2.2)	36,340 (2.5)	57,874 (3.3)	27,357 (1.3)	25,784 (1.0)	22,714 (0.7)
내부 거래	3,292 (1.5)	6,583 (1.8)	15,855 (2.9)	84,437 (10.3)	15,514 (10.2)	103,727 (7.3)	133,973 (7.6)	159,193 (7.6)	214,669 (8.7)	253,593 (8.0)
예비비및 기타	2,832 (1.3)	560 (0.2)	2,257 (0.4)	3,443 (0.4)	6,607 (0.4)	6,542 (0.4)	19,518 (1.1)	17,014 (0.8)	16,327 (0.6)	35,412 (1.1)

□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지방정부 역할과 위상

○ 지방정부 역할은 주도적이지 않고, 중앙 또는 국가에 의한 정책 결정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대리인이거나 처리만 하는 정책의 배출구 역할에 그침

- ▶ 이러한 제한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제약과 함께 한국 사회의 만연한 중앙 집권적이며 국가중심적 사고와 인식 및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

□ 바람직한 미래의 지방정부 역할

○ 중앙의 동반자인 지방정부

- ▶ 앞으로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동반자와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며,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변경해야함
-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법의 전향적 개정 및 지방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 재정법 역시 전부 개정 작업이 필요함
- ▶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간 정부 간 수직관계를 수평적인 협력과 연대 형태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동시에 특·광역시와 특례시 등 도시 정부와 도와 시·군 등 전원 정부의 구성 및 기능과 재원 부담 구조 등을 재설계 해야 함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통합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

- ▶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등 필수 기능을 충실히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도적·정치적 한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시범적용을 확대해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함

○ AI통합플랫폼으로서의 지방정부

- ▶ 지방행정의 노동집약적 업무에 대해 소규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AI를 시범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재정 뉴스

□ 2025년 상반기 지방세수입 동향 [\[행정안전부 2025. 8. 8.\]](#)

○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15조 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

- ▶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 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 7천억원) 대비 2조 5천억원 증가하였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전년 동기(63.9%) 대비 10.1%p 증가
- ▶ 취득세 수입액은 13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 4천억원) 대비 1조원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 대비 3.2%p 증가
- ▶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 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 2천억원) 대비 6천억원 증가하였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53.8%) 대비 2.0%p 감소

□ 최대 4,500만원 지원, 세종테크밸리 이전기업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2025. 8. 10.\]](#)

○ 첨단산업 기업 안정적 정착 도모...렌트프리도 추가 별도 지원

- ▶ 지원 대상은 시 미래전략산업 5+1(정보보호·미래모빌리티·디지털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방송영상미디어·양자) 분야에 해당하면서 세종 외 지역에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본사와 공장, 연구소이며, 지원기업에게 연 2,000만원씩 2년간 총 4,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사무실 조성을 위한 내부 공사비도 최초 1회에 한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방침
- ▶ 지원기업은 시 지원과 별개로 임대기업으로부터 2년 계약 기준 총 6개월의 임대료 무상혜택(렌트프리)을 추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 지원과 임대료 무상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의무기간 2년을 포함, 총 4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함

□ 8~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2025. 8. 11.\]](#)

○ 기존 3개월서 4개월로 확대 운영...체납액 징수 총력

- ▶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 ▶ 특히 고액·고질 채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하며 자동차세 채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채납자 등에 대해서는 ▲채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

□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2025. 8. 13.]

○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 중점관리기관이 감소(108개→105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음

- ▶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247조 1천억원이며, 부채 69조 8천억원, 자본 177조 3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813억원을 기록
- ▶ 자산 규모는 전년(238조 8천억원) 대비 8조 2천억원(3.4%)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
- ▶ 부채 규모는 전년(65조 5천억원)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임.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p 상승해 39.3%이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2조 6,216억원) 대비 598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2025. 8. 14.]

○ 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10.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37% 부탄△37%	△20% △30% △30%	△15% △23% △23%	△10% △15% △15%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 ▶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특별교부세 26억 확보, 시민 체감형 사업 박차 [\[세종특별자치시 2025. 8. 17.\]](#)

○ 제2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설치 등 7개 사업 선정

- ▶ 이번 특별교부세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입되며 선정 사업은 ▲제2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설치(5억) ▲조치원 새내로 야간환경 개선(5억)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2건(6억) ▲조치원읍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1억) ▲미호대교 보수보강(5억) ▲송학교 보수보강(4억) 등 총 7건
- ▶ 도담동에 위치한 제2자동집하시설에는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해 집하장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조치원읍 기업은행 앞 사거리부터 남리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는 새내로 구간은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한글 자음·모음을 형상화한 조명을 설치해 '로컬특화거리'로 조성

□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원 추가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5. 8. 25.\]](#)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원 지원

- ▶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R&D 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1.3% 금리('25.8월 기준)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탄소녹위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에게도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함
- ▶ '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83건의 프로젝트에 6,480억원의 융자금 지원을 지원하여 2.6조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음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 2025. 8. 25.\]](#)

○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 지원

-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지원

-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 8. 28.\]](#)

○ 390.2조원으로 2026년 국세수입 예산 편성

-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5년 예산(2차 추경예산 372.1조원) 대비 18.2조원 증가한 390.2조원으로 편성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8.6조원(2025년 추경예산 361.5조원 대비 17.1조원 증가), 특별회계를 11.6조원(2025년 추경예산 10.6조원 대비 1.0조원 증가)으로 편성
- ▶ 소득세는 2025년 예산 대비 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전망이며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법인세는 2025년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따라 2025년 추경예산 대비 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는 2026년 내수 회복에 따라 2025년 추경예산 대비 3.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2025. 8. 29.\]](#)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와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집중 투자

- ▶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임.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역점
- ▶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
- ▶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Delta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

□ **9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 2025. 8. 29.](#)]

○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

- ▶ 표면금리는 8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0%, 10년물 2.820%, 20년물 2.8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450%, 10년물 0.565%, 20년물 0.635%씩 추가할 예정
- ▶ 9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
- ▶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

□ **세종시, 여민전 캐시백 혜택 9월부터 13%로 상향** [[세종특별자치시 2025. 8. 29.](#)]

○ **최대 3만 9,000원 캐시백 혜택, 1인 월 구매한도 30만원 동일**

- ▶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이 기존 2%에서 8%로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캐시백 비율이 6% 상향됨에 따라 1인당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2만 1,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원, 올해 대비 43.8% 증가** [[행정안전부 2025. 9. 2.](#)]

○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중점 투자**

- ▶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원(43.8% ↑)이 증가한 6조 6,665억원을 편성

< 2026년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

사업비 합계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국민 안전	자치발전·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6조 6,665억	8,649억	2조 5,197억	2조 5,921억	6,898억

□ **17개 시·도와 한데 모여 2026년 주요 예산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 2025. 9. 5.](#)]

○ **2026년 주요 예산안 및 주요 정책 관련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8세 미만 → 9세 미만) 및 지방 우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시행,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AI기반 복지·돌봄 혁신, 자살예방 및 대응 강화 등 지자체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특히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의

□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2025. 9. 10.](#)]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까지**

- ▶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
- ▶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임

□ **강원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 2025. 9. 12.](#)]

○ **강릉시 용수 확보 대책을 위해 재난특교세 15억원 교부**

- ▶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억원을 지원하며,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 앞서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원에 이르게 됨

□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 822억 부과 [\[세종특별자치시 2025. 9. 14.\]](#)

○ 전년 동기 대비 21억원 증가, 30일까지 납부

- ▶ 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3,045세대 입주와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약 2.6%(21억원) 늘었으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
- ▶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전액 부과

□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2025. 9. 16.\]](#)

○ 285명 대상 5억 5,000여만원, 공공시설 피해 연내 복구 노력

- ▶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지원금 5억 4,649만 8,000원을 추석 명절 전 지급되며 주택·소상공인·농업인 등 피해가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위로금을 포함해 총 5억 4,649만 8,000원(국비 3억 7,171만 4,000원, 시비 1억 7,478만 4,000원)임
- ▶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

□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 예산 35% 소진 [\[산업통상자원부 2025. 9. 16.\]](#)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

- ▶ 지난 1달간 882억원, 66.2만건의 신청건이 접수(9월 12일 기준)되어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되었으며, 8월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어 현재 407억원, 30.4만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됨
- ▶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작 이후 그간의 매출 실적을 공유함. 각 업체들로부터 환급대상 제품의 매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가전 A사의 경우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환급 대상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29% 증가, 김치냉장고 협력업체인 B사의 경우 23% 매출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의 경우는 584%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대·중소 상생 협력의 성과도 확인

03

재정정책

- ① 고향사랑기부제, '법인의 기부허용'에 대한 쟁점과 방향
- ② 세종시 농업인 수당 성과와 과제
- ③ 한국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1. 고향사랑기부제, '법인의 기부허용'에 대한 쟁점과 방향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2025.08.)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기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업 기부 허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음. 일본 사례는 재정 확충 효과와 함께 편중·유착 위험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도입 시 신중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와 현황

○ 제도 도입 배경

- ▶ 2023년부터 도입·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2008년부터 논의가 이어지다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공포)를 거쳐 제도화되었음
-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 방식으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됨

○ 우리나라 고향기부제 운영 실적 및 평가

- ▶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약 879억원(77만건), 전년 대비 금액 35%, 건수 47% 증가
- ▶ 추정 비용은 총 483억원(답례품 263억원+인건비 200억원+시스템 운영 20억원)
- ▶ 순확충 효과('24년 기준) : 모금액(879억)-비용(483억)=약 396억원
- ▶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순확충 효과는 연간 약 400억원 수준에 그쳐 310조원 규모에 달하는 지방재정에서 의미 있는 재정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일본의 지방창생응원세제 및 ‘법인 기부허용’의 배경

○ 제도 도입 배경

- ▶ 일본은 2014년 「지역창생법」 제정→지방이 발전 전략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지원, 2016년 기업판 고향납세(지방창생응원세제) 신설→기업이 지역개발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

○ 세제 혜택 구조

- ▶ 일본은 2016년 기업판 고향납세를 도입할 당시, 일반조치 30%+특별조치 30%=최대 6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음
- ▶ 2020년 제도 개편에서, 특별조치 한도를 60%까지 확대해 총 9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됨
- ▶ 즉, 기업이 기부한 금액의 90%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기업의 부담은 10%에 불과함
- ▶ 기업 본점 소재지 기부는 금지, 기부 대가로 사업 참여 불가→정경유착 방지 장치 마련됨

○ 성과와 시사점

- ▶ (성과)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는 도입 초기 2016년 7.5억 엔에 불과하던 기부액이 2023년에는 470억엔으로 약 60배 증가, 참여 기업 수 역시 459개에서 7,680개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기부 건수 또한 517건에서 14,002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음
- ▶ (한계) 2024년 후쿠시마현에서, 한 기업이 기부한 뒤 그 기업의 자회사가 해당 기부금이 쓰이는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발생, 제도의 설계가 미흡할 경우, 기부를 명목으로 기업이 이익을 되돌려 받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유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줌
- ▶ (시사점) 제도가 재정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명한 운영과 유착 방지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기업 기부를 도입할 경우, 기부 대상 사업을 엄격히 한정하고, 기부 기업이 직접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함

□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 관련 고려 사항

○ 법적 제한과 제도 형성 배경

- ▶ 우리나라 「기부금품법」은 1951년 제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권한을 앞세워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으며, 이는 과거 강제 모금과 정경유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본 원칙임
- ▶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당시에도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기부는 배제함

○ 세제특례 구조와 재정이전 효과

- ▶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인세법」 상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의 50%까지 세금 계산에서 비용 처리 가능
- ▶ 법인세가 초과 누진세 구조라 기업은 절세 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법인세는 주로 국세이며, 지방세는 국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과세로, 기업 기부에 세제 특례를 적용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줄고, 해당 금액이 기부 대상 지자체로 이전됨
- ▶ 법인 기부는 새로운 재원 창출보다는 중앙정부 세입 감소와 지방 간 불균형 재정 이전의 성격이 강함

○ 기부금 편중과 유착 위험성

-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목적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지역경제 활성화·국가균형 발전이지만, 실제 성과는 목적과 차이가 있음
- ▶ 2023년 기초자치단체 기부금액 분포를 보면, 상위 10% 지자체가 전체의 31%, 상위 50% 지자체가 82%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18%에 불과하며, 이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게, 브랜드와 자원을 가진 일부 지자체에 기부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 ▶ 연구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 확대 요인은 전담조직, 홍보활동, 답례품 등이며, 결국 인적·물적 자원과 특산품을 보유한 지자체가 유리함
- ▶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기부가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인 기부 허용 시 특정 지역 쏠림과 정경유착 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방향

- ▶ 일본 사례는 기업 기부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정경유착, 기부 강요, 편중 심화의 위험도 드러냄
- ▶ 우리나라에서 기업 기부 허용을 검토할 경우, 정책 목표를 우선 명확히 해야 함. 일반재원 확충 목적이라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허용 가능, 특정 사업 지원 목적이라면 제한적 허용이 필요
- ▶ 인구 감소 지역이나 낙후 지역 중심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 기업이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 심사와 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함
- ▶ 기업 기부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면서도 본래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제도 설계가 필수적임

2. 세종시 농업인 수당 성과와 과제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2025.8.19.)

□ 세종시 농업인 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행 초기 성과를 입증함. 그러나 고령화 심화, 청년농 부족, 지급 기준 모호성과 재정 부담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남. 향후 공익적 활동 연계, 지급 시기·기준 개선, 세대 균형 확보를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도입 배경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환경 보전, 먹거리 안전, 공동체 유지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요소이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체계는 부족했음. 2018년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국 여러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됨
- 세종시는 시정 4기 공약으로 농업인 수당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함. 제도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음

□ 제도 개요

- 세종시 농업인 수당은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거주 3년 이상, 일정 농지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구조임
- 2023년에는 5,249명에게 총 31억 5천만원이 지급되었고, 2024년에는 6,117명으로 늘어나 총 36억 7천만원이 지급됨. 만족도 조사에서는 92%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함

□ 농업인 현황과 구조적 문제

- 세종시 농업경영체 수는 2024년 기준 18,227명으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0.4%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농업인 수당 도입 이후 감소폭이 다소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거나, 인구 구조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53.2%로 절반을 넘고 45세 미만 청년농은 6%에 불과함
- 고령화 심화와 청년농 부족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수당이 단기적 소득 안정에는 기여하나 세대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농가 체감 효과

- 농업인 대다수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92.5%가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삶의 질 향상(45.2%), 소득 증가(36.6%), 가구지출 확대(44.2%)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했다고 응답함
- 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농자재 구입(48.6%)이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23.5%)이 뒤를 이어 농업 경영 안정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발생시킴
- 다만 지급 시기가 농번기와 맞지 않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체납자 지급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됨

□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2023년	2024년	특징
투입 자원	약 31억 5천만원	약 37억원	연간 36~37억원 수준, 전액 지역화폐(여민전) 지급
생산유발효과	525억원	619억원	지급 규모 대비 15~17배 효과
부가가치유발	279억원	329억원	지역 내 경제 파급력 확대
고용유발효과	74명	87명	농촌·지역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기여
종합 평가	재원 대비 파급효과 큼	효과 확대 추세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 문제점과 한계

- 농업인 수당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가 드러남. 매년 35~37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세종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또한 체납자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고, 지급 시기가 늦어 농업인이 실제 필요한 시점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남
 - 아울러 농외소득이 높은 농가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청년농 유입 효과가 미흡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개선 과제

- 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급 시기를 농번기에 맞춰 실질적 지원 효과 제고 필요
- 체납세 기준과 농지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재정 안정성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대책 마련 필요
- 청년농 유인을 위한 별도 인센티브·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친환경 농업·공동체 활동·로컬푸드 정책 등 공익적 활동과 연계해 제도 발전 필요

□ 결 론

- 세종시 농업인 수당은 시행 2년 만에 높은 만족도와 뚜렷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 정책적 성과를 입증함. 농업인 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체납세 징수 기여 등 다방면에서 성과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고령화 심화, 청년농 부족, 재정 부담, 지급 기준 모호성 등 구조적 한계도 명확히 드러남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급방식·시기·기준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청년 세대 유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3. 한국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Vol.55)(2025.6.)

□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에 발맞춰 지방재정 제도의 책임성과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문제점

○ '국가 최저선(national minimum)' 기준 방식 지방교부금 제도

-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수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성과 평가나 인센티브 메커니즘 부재로 지방정부 간 경쟁 및 정책 혁신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음

□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분권화와 성과 기반 지방 경쟁 모델의 도입

- ▶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세금 수준을 비교하여 가장 만족스러운 조합을 제공하는 자치단체로 이주(티부 이론: '발로 하는 투표')
- 지방정부 간 시장과 유사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성과 중심 재정지원은 지방의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경쟁을 촉진
- ▶ 단순한 재정 권한 이양만으로는 지방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적 투명성과 정치적 여건에 따라 재정 운용의 왜곡 가능성 존재
- 재정 분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 제도화, 예산 집행 책임 명확화, 객관적·지속적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성과 기반 예산 제도와 재정 연계 인센티브 설계

- ▶ (성과 기반 예산 제도) 투입(input) 위주의 전통적 자원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려는 방식
- 예산편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 목표가 얹힌 정치적 결정의 과정이며, 예산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정당성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함

- ▶ **(재정 연계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감축 또는 조건 강화 등 제재를 가하여 지방의 정책 실행력과 혁신 유인을 제고
-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방식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과 결합하여 운영 가능
 - **(보조금 기반의 경쟁 공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춰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성과 가능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지방정부 간 수평적 경쟁 및 정책 창의성·실행력 촉진
 - **(성과지표 기반의 차등 교부)** 중앙정부가 설정한 지표(실업률 감소율, 환경정책 성과, 교육지표 향상 등)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해 교부금을 차등 배분함으로써 목표 관리와 정책 책임성을 제도화함
 - **(패널티 및 보상 메커니즘)** 성과 미흡 지방정부는 제재하고 우수 지역에는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과 계약제’나 ‘보상 연계형 예산 집행’이 해당되며, 행정 개선 유도 및 자원 배분의 정당성 확보

□ 주요 해외 사례

○ [미국] 경쟁 기반 보조금과 성과 연계 지원

- ▶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성과와 경쟁을 중시하는 제도적 원칙 확립
-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각 주의 교육 개혁 계획과 실행 성과를 평가해 경쟁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Race to the Top(RTT)’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

○ [영국] 성과 협약 제도와 지방정부 역량 강화

- ▶ 199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성과 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목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예산과 평가를 연계하는 체계 마련
- 우수한 부처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와 자율권을 제공해 조직의 책임성과 동기부여를 강화, 성과 중심 정책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실현한 사례임

○ [스웨덴·핀란드] 성과 기반 자치 행정과 수평적 경쟁체계

- ▶ 핀란드는 성과 계약에 따른 차등적 재정 인센티브로, 스웨덴은 비교기준 지표 공개를 통한 경쟁과 정책 학습 유도로 중앙의 정책 목표와 지방의 자율성 간 균형을 제도화함
- 그러나, 성과 정보와 예산 연계가 미약하고, 지표 모호성, 측정 어려움, 권한 조정 복잡성 등 제도 구현에 한계가 존재함

○ [호주] 국가협약과 공동책임제

- ▶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성과 목표와 측정 지표를 정하고 달성률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효율성 강화
- 중앙과 지방 간 공동 책임 체계를 제도화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성과 중심 행정을 촉진하는 모범적인 사례임

04

경제동향

- ① 정부 경제동향
- ② 정부 재정동향
- ③ NABO 산업동향&이슈
- ④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01. 정부 경제동향

출처 기획재정부, 9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

- ▶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
- ▶ 추경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

□ **'25.7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증가, 건설투자 감소**

- ▶ 생산은 건설업(전월비 $\Delta 1.0\%$, 전년동월비 $\Delta 14.2\%$)에서 감소했으나, 광공업(전월비 0.3% , 전년동월비 5.0%), 서비스업(전월비 0.2% , 전년동월비 2.1%)에서 증가하여 소산업 생산(전월비 0.3% , 전년동월비 1.9%) 증가
-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25% , 전년동월비 24%), 설비투자(전월비 7.9% , 전년동월비 $\Delta 5.4\%$) 증가
- ▶ 소비자심리<'25.8월 CSI 111.4(전월비 $+0.6p$)> 상승, 기업심리 실적<전산업 CBSI '25.8월 91.0(전월비 $+1.0p$)> 및 전망<전산업 CBSI '25.8월 91.8(전월비 $+3.4p$)> 상승
- ▶ '25.7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하락($\Delta 0.1p$),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상승($+0.5p$)

□ **'25.8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물가는 상승폭 축소**

- ▶ '25.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6.6만명 증가('25.7월 17.1만명 \rightarrow 8월 16.6만명), 실업률은 2.0% 로 전년동월 대비 $0.1p$ 상승
- ▶ '25.8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7% 상승('25.7월 2.1% \rightarrow 8월 1.7%),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1.3% 상승

□ **'25.8월 중 금융시장은 주가 하락, 국고채 금리 하락, 환율 상승**

- ▶ '25.7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

02. 정부 재정동향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 7월 누계 총수입은 385.0조원, 진도율은 59.9%

- ▶ (국세수입)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8조원 증가
 - '24년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14.5조원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9.0조원 증가,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세종지원 효과 등으로 △1.5조원 감소,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증권거래세 △1.3조원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으로 1.0조원 증가
- ▶ (세외수입) 7월 누계 세외수입은 21.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조원 증가
- ▶ (기금수입) 7월 누계 기금수입은 131.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조원 증가

□ 7월 누계 총지출은 442.5조원, 진도율은 62.9%

□ 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7.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9.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8조원 적자

□ '25년 7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22.1조원 증가한 1,240.5조원

-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90.1조원(발행 145.7조원, 상환 55.6조원), 외평채 잔액 10.9조원 증가, 주택채 잔액은 △1.7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99.3조원 순증

□ '25.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0조원(경쟁입찰 기준 18.8조원)

- ▶ 8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 금리 변동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단기 금리 하락, 장기 금리 상승
- ▶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66.0조원, 8월 조달금리는 2.55%로 전월(2.60%) 대비 하락, 응찰률은 259%로 전월(251%) 대비 상승
- ▶ 8월 외국인 국고채는 +1.5조원 순유입

03. NABO 산업동향&이슈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산업동향&이슈 (제77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과 서비스업의 완만한 수요 증가로 개선
-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1.2% 증가
 -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0.7 → (5월) -0.8 → (6월) 0.8
 -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7 → (5월) -1.1 → (6월) 1.2
-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전월대비 1.7% 증가
 -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5.4 → (5월) -0.3 → (6월) 1.8
 -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6 → (5월) -3.4 → (6월) 1.7
-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전월대비 0.5% 증가
 -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1.0 → (5월) 1.2 → (6월) 1.8
 -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1 → (5월) -0.1 → (6월) 0.5
- 7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466.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 수출액(억달러): ('25.4월) 441.3 → (5월) 444.4 → (6월) 459.1 → (7월) 466.2
 -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4월) 1.7 → (5월) -1.7 → (6월) 2.7 → (7월) 5.3
- 6월 배출권(KAU24) 증가는 전월대비 하락,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 ▶ KAU24 증가(원/톤): ('25.4월) 8,790 → (5월) 8,940 → (6월) 8,700
 - ▶ KAU24 장내거래량(천톤): ('25.4월) 1,928 → (5월) 2,428 → (6월) 3,377
- 7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비철금속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25.4월) -19.8→ (5월) -18.1 → (6월) -11.2 → (7월) -13.5
 - ▶ 농산물 가격(전년동월대비,%): ('25.4월) -0.5→ (5월) 2.0 → (6월) -2.0 → (7월) -2.1
 - ▶ 비철금속 가격(전년동월대비,%): ('25.4월) -5.9→ (5월) -8.4 → (6월) -1.8 → (7월) 3.2

04.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5.9

□ 2025년 7월중 제조업 생산은 부진을 이어갔으나, 소비와 수출은 개선되었으며 투자는 지표별로 엇갈리는 모습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연간	7월	1/4	2/4	3/4	4/4	1/4	2/4 ^B	6월 ^B	7월 ^B		
제조업 생 산	생산지수	-0.4	-4.8	6.5	-2.5	-2.4	-3.0	-11.4	-5.0	-6.1	-1.6		
	출하지수	-4.1	-5.8	1.6	-3.4	-8.3	-6.0	-8.6	-4.5	-3.1	0.8		
	재고지수	-2.5	1.1	6.8	4.5	9.8	-2.5	-10.0	-7.8	-7.8	-8.1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¹⁾	3.6	-2.9	6.6	1.3	3.8	2.9	8.3	2.8	1.7	2.7		
	승용차신규등록대수	-6.3	-0.6	-2.0	-17.8	-12.5	8.2	-6.9	21.5	46.5	47.7		
투 자	자본재수입	-2.4	-15.6	9.6	-2.3	5.1	-20.0	-18.1	21.4	87.1	18.0		
	건축착공면적	66.1	-21.9	-33.7	83.1	89.5	147.8	-23.0	-42.9	-84.3	15.1		
	건축허가면적	98.2	-30.0	-13.4	326.9	-44.4	24.9	-32.6	-84.4	-72.0	-38.9		
대 외 거 래	수 출	24.3	12.1	34.8	85.3	2.7	-15.6	-10.4	-37.2	-64.5	18.7		
	수 입	12.2	31.4	28.4	-6.5	21.5	10.2	-11.8	8.1	19.1	-18.0		
고 용	취업자수증감(천명)	2.3	2.0	1.9	-0.2	1.4	6.2	3.2	2.5	1.3	-1.5		
	고용률	65.2	66.0	63.3	65.6	65.8	66.0	64.0	65.6	65.3	64.6		

주: 1) 매장면적 3천㎡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 (제조업 생산) 2025년 7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 축소
- ▶ (소비) 2025년 7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 확대
- ▶ (설비·건설투자) 2025년 7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증가폭 축소
- ▶ (수출입) 2025년 7월중 세종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은 증가 전환
- ▶ (고용) 2025년 7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는 감소 전환
- ▶ (소비자물가) 2025년 8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둔화 (25.7월 +2.2% → 8월 +1.8%)
- ▶ (주택가격) 2025년 7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상승폭 축소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2025년 (%)											
		2024년						2025년					
		연간	7월	8월	1/4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¹⁾		2.4	2.4	2.3	2.8	2.7	2.2	1.9	2.6	2.1	2.1	2.2	1.8
주택매매가격 ²⁾		-5.68	-0.46	-0.18	-2.32	-1.99	-0.79	-0.69	-0.90	2.10	0.39	0.04	..
주택전세가격 ²⁾		-4.14	-0.15	-0.29	-2.14	-2.12	-0.37	0.45	-0.27	0.67	0.33	0.17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05

재정통계

- ① 주요 경제지표
- ② 세종시 주요 통계
- ③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01. 주요 경제지표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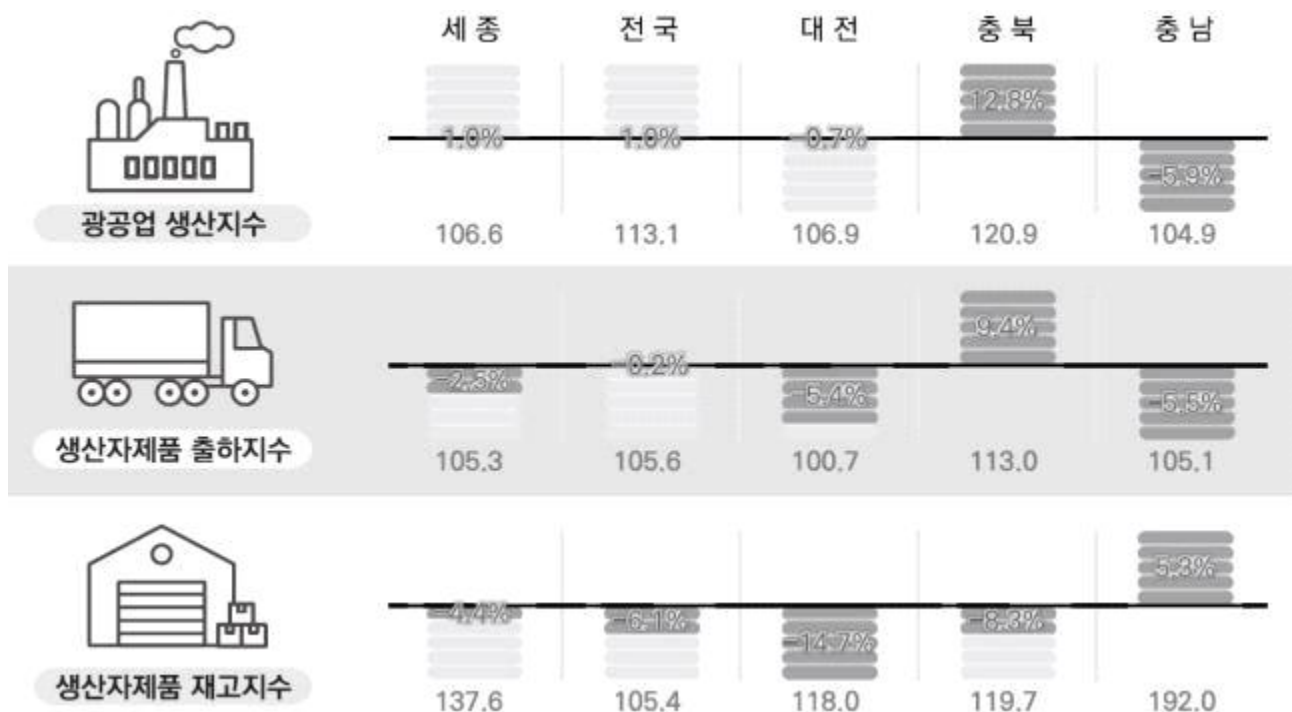
고 용 |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5. 5.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전년동월비/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5. 5.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전년동월비/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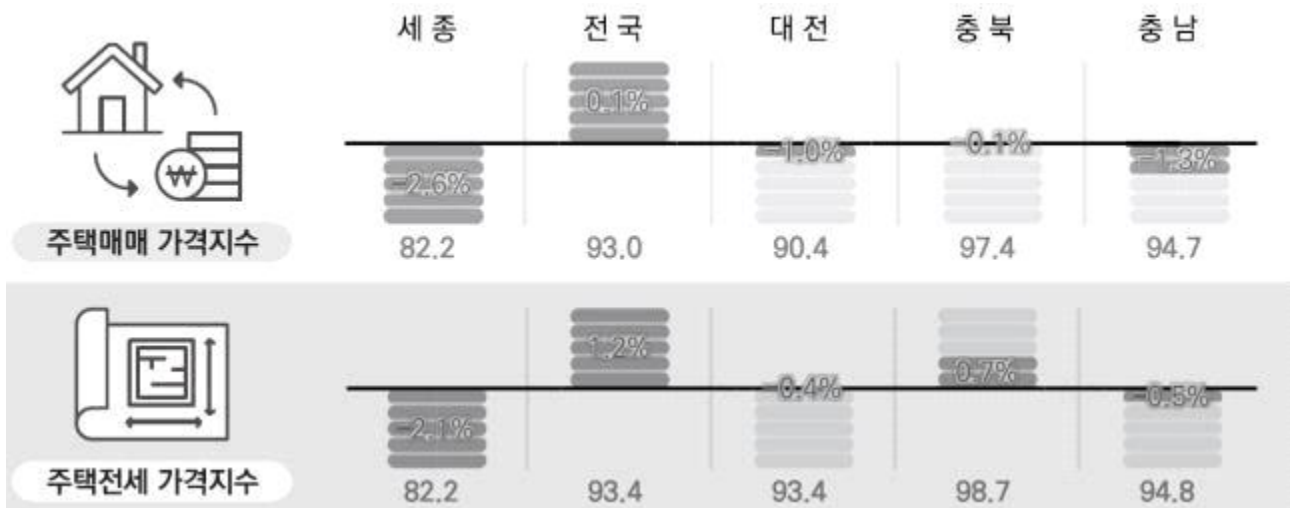
소 비 | 전년동월비/2022=100

25. 5.



부동산 | 전년동월비/2022.1=100

25. 5.



수출입 | 전년동월비

'25. 5.



금융 | 전년동월비

'25. 5.



지역특성 | 전년동월비

'25. 5.



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2025년 1분기 세종통계분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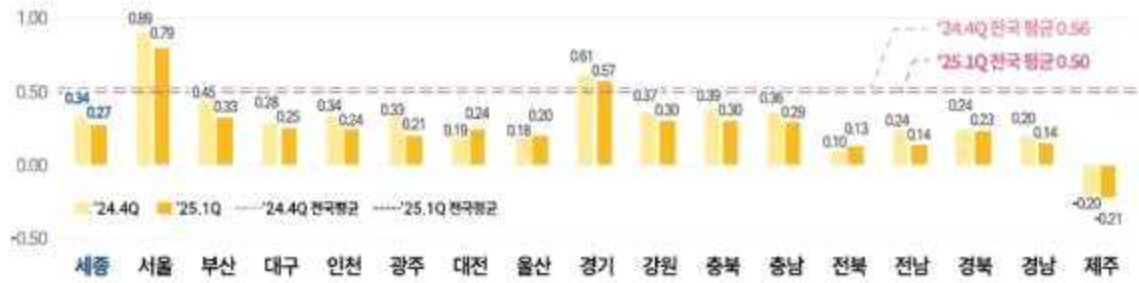
2025년 1분기(1월~3월) 기준



물 가 · 가 계	비빔밥 	치킨 	돼지갈비 	삼겹살 	자장면 
	8,067 원	21,000 원	13,750 원	16,223 원	7,167 원
	커피 	공동주택관리비 	택배이용료 	미용료 	영화관람료 
고 용	3,017 원	182,217 원	5,500 원	16,833 원	13,833 원
	김치찌개백반 	세탁료 			
	9,833 원	7,900 원			
재 정 · 금 융 · 보 험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325 천명	214 천명	110 천명	208 천명	6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64세 고용률	
	66.0%	64.0%	3.0%	68.4%	
	<div> <div>총가계대출</div> <div>8,836.9 십억원</div> </div>				
	 <div> <div>예금은행</div> <div>7,492.4 십억원</div> <div>주택담보대출 6,171.1십억원</div> <div>기타대출 1,321.3십억원</div> </div> <div> <div>비은행예금취급기관</div> <div>1,344.5 십억원</div> <div>주택담보대출 325.9십억원</div> <div>기타대출 1,018.6십억원</div> </div>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 출처 : 국토교통부 (단위 :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단위 : %)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지	전	답	임야	기타
2025. 1/4	0.194	0.110	0.265	0.532	0.528	0.199	-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단위 : %)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2025. 1/4	0.213	0.074	0.231	0.370	0.242	0.473	0.534	0.478	0.374	0.058

03.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출처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2025.9.1.)

1. 연도별 학교 현황

○ 학교 수

(단위: 교, 원)

학교급	구분	2021 (4.1.)*	2022 (4.1.)	2023 (4.1.)	2023 (9.1.)	2024 (4.1.)	2024 (9.1.)	2025 (3.1.)	2025 (4.1.)
유치원	공립	60	62	63	63	64	65	64	64
	사립	2	2	2	2	2	2	0	0
	계	62	64	65	65	66	67	64	64
초등학교	공립	51	52	53	53	53	54	55	55
중학교	공립	26	27	27	27	27	27	28	28
고등학교	공립	20	20	20	20	20	20	21	21
	사립	1	1	1	1	1	1	1	1
	계	21	21	21	21	21	21	22	22
특수학교	공립	1	1	2	2	2	2	2	2
각종학교	공립	0	0	0	0	1	1	1	1
총계	공립	158	162	165	165	167	169	171	171
	사립	3	3	3	3	3	3	1	1
	계	161	165	168	168	170	172	172	172

* 4.1.은 교육기본통계 조사 기준일

○ 학급 수

(단위: 학급)

학교급	구분	2021 (4.1.)	2022 (4.1.)	2023 (4.1.)	2023 (9.1.)	2024 (4.1.)	2024 (9.1.)	2025 (3.1.)	2025 (4.1.)
유치원	공립	418	433	434	434	429	439	433	433
	사립	8	7	5	5	4	4	0	0
	계	426	440	439	439	433	443	433	433
초등학교	공립	1,472	1,587	1,650	1,653	1,619	1,641	1,608	1,609
중학교	공립	609	643	658	658	659	659	674	674
고등학교	공립	455	481	519	519	561	561	576	576
	사립	24	24	24	24	24	24	24	24
	계	479	505	543	543	585	585	600	600
특수학교	공립	34	35	48	48	55	55	58	58
각종학교	공립	0	0	0	0	6	6	6	6
총계	공립	2,988	3,179	3,309	3,312	3,329	3,361	3,355	3,356
	사립	32	31	29	29	28	28	24	24
	계	3,020	3,210	3,338	3,341	3,357	3,389	3,379	3,380

○ 학생 수

(단위: 명)

학교급	구분	2021 (4.1.)	2022 (4.1.)	2023 (4.1.)	2023 (9.1.)	2024 (4.1.)	2024 (9.1.)	2025 (3.1.)	2025 (4.1.)
유치원	공립	6,474	6,311	6,178	6,207	5,860	6,037	5,899	5,846
	사립	126	111	76	75	42	35	0	0
	계	6,600	6,422	6,254	6,282	5,902	6,072	5,899	5,846
초등학교	공립	30,726	32,230	32,614	32,649	32,131	32,460	30,905	30,981
중학교	공립	13,822	14,809	15,500	15,477	15,768	15,805	16,645	16,609
고등학교	공립	10,305	10,913	11,833	11,746	13,150	13,068	13,720	13,705
	사립	513	571	611	607	624	616	638	637
	계	10,818	11,484	12,444	12,353	13,774	13,684	14,358	14,342
특수학교	공립	175	186	229	229	279	262	299	313
각종학교	공립	0	0	0	0	39	55	미정	59
총계	공립	61,502	64,449	66,354	66,308	67,227	67,687	67,468	67,454
	사립	639	682	687	682	666	651	638	637
	계	62,141	65,131	67,041	66,990	67,893	68,338	68,106	68,091

※ 세종늘벗학교(위탁형 대안학교)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에 포함

- 새학년 시작 후 위탁절차를 진행하여 향후 학생 수 반영 예정(3월말)

○ 교원 수

(단위: 명)

학교급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유치원	공립	506	561	585	595	588	591	588
	사립	18	15	12	10	6	5	0
	소계	524	576	597	605	594	596	588
초등학교	공립	1,744	2,066	2,150	2,222	2,255	2,280	2,243
중학교	공립	934	1,018	1,092	1,145	1,129	1,124	1,106
고등학교	공립	887	969	1,016	1,062	1,095	1,151	1,137
	사립	50	50	48	47	48	47	46
	소계	937	1,019	1,064	1,113	1,143	1,198	1,183
특수학교	공립	49	46	47	55	66	72	72
각종학교	공립	-	-	-	-	-	9	13
총계	공립	4,120	4,660	4,890	5,079	5,133	5,227	5,159
	사립	68	65	60	57	54	52	46
	계	4,120	4,660	4,950	5,136	5,187	5,279	5,205

※ 휴직·파견 교원 포함, 본청 근무 교원 제외

「세종재정」 2025년 세번째

발행일 2025. 9.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기획·조정 차하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작 성 김운화 사무관, 문건아 주무관
신현지 주무관, 이옥선 주무관
김재원 주무관

전 화 044-300-7531~7535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